

제1절 해방공간과 미군정기 울진 지역

1. 해방과 울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은 한국의 독립으로 이어졌다. 해방의 감격도 잠시 자주적 통일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해야 했다. 그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자치 조직이 결성되어 총독부의 행정기구와 경관기관의 역할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자치 노력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 결성으로 나타났다. 건준은 1944년 일제의 패망을 예견해 해방을 준비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직된 조선건국동맹에서 비롯된 조직이었다. 건준이 결성되면서 해방 후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새로운 구심체가 형성되었다.

건준은 위원장에 여운형과 부위원장에 안재홍을 중심으로 총무부·재무부·조직부·선전부·무경부 등 중앙부서를 갖추고 본격적인 건국준비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국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한 강령도 발표하였다. 건준은 강령에서 ①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② 우리는 전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함, ③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등을 선언하였다.

건준은 점차 체계를 잡으면서 전국으로 활동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건국치안대와 식량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치안과 식량 대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건준의 지방지부는 광복 직후 어려운 상황에서 각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건준은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참가하는 민족연합전선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특히 지방 건준의 지도부에는 독립운동가를 비롯하여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언론인, 지식인뿐만 아니라 지방유지, 지주까지 참여했다. 지방의 지주나 우익적 성향의 인물들까지 건준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준의 활동이 치안 유지·물자확보 등을 바탕으로 국가 건설을 준비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비록 정치적으로 이념이나 지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지만, 독립국가 수립을 열망하는 대중들의 지지를 토대로 미군 진주 이전에 실질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건준 이후 지방에 뿌리를 둔 인민위원회가 자생적으로 등장하고 자발적으로 운영되었다. 1945년 8월 말쯤 전국 13개 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45개 지역에 시·군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945년 11월까지 전국 각도 시·군·읍·면 단위 대부분에서 지역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지방 단위의 자치 경찰 기구인 치안대도 162개 정도 조직되었다. 그중 건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역주민에 의해 결성된 곳도 있다. 지역인민위원회는 미군정이 자리 잡기 전까지

치안대 등과 함께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면서 건국에 대비한 각종 준비 작업을 시작하며 일제의 행정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대체로 조직, 선전, 치안, 식량,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지역에 따라 보건 후생, 귀환 동포, 소비 문제, 노동 문제, 소작료 문제 등을 다루는 부서를 조직했다.

1945년 11월 9일 미군정청 특사 윌리엄은 강원도청 지사실에서 친일관리 파면 및 미군정청의 고문제 실시 등과 관련하여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울진대표를 비롯해 춘천군 대표 김우종, 강치봉, 최규옥, 김근영, 이범래, 유희소, 최학운과 강릉의 우종대, 홍천, 횡성, 원주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자치위원회 대표들은 친일관리에 의한 모략과 통역의 농간으로 미군정청과 민중 간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역 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 여론을 대변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미군은 진주 후 미군정을 선언함으로써 지역위원회의 활동도 차츰 세력을 잃어갔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흡수하기도 하고 무력을 동원하여 해체하기도 하여 1946년 초까지 군단위 위원회는 거의 붕괴되었다.

2. 미군정기 울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으로 해방을 맞았지만, 연합국의 전후 정책으로 보면 불완전한 해방이었다. 연합국을 이룬 미·소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면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을 분할 점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한반도의 주도권은 미·소가 장악하였다.

미국 정부는 만주 지역 관동군과 일본의 군사력을 고려해 일찍부터 소련군의 참전을 요청하였다. 더욱이 소련의 참전 조건이 소련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고,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자 소련은 얄타회담의 합의대로 대일 참전의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을 계기로 소련은 8월 9일 대일 선전 포고를 발표했다.

소련 지상군은 만주 국경지대에서 일본 관동군을 공격하였고, 공군도 소련 국경지대와 가까운 옹기, 나진, 청진의 일본군 부대와 군사시설을 폭격하였다. 1945년 8월 11일 소련은 한반도의 옹기를 점령하고, 8월 12일 나진, 8월 13일 청진에 상륙해 남진을 계속했다. 8월 13일에 1개 사단 병력을 청진에 상륙시키고 기갑부대를 증강시켰다. 이어 8월 21일에는 태평양 함대의 상륙부대가 원산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8월 24일에는 제1극동군 공정대가 평양을 점령하였다. 소련군은 대략 3만 명 선에 달하는 소련계 한인들과 함께 진주했다.

반면, 미국은 아직 일본 본토에 진격하지 못한 채 류큐[琉球]에 머물고 있었다. 그로 인해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일이 요구되었다. 이에 다급해진 미국은 소련에 대해 미·소 양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을 받을 경계선으로 38도선을 제의

했다. 미국의 경계원조를 기대하고 또 일본 점령에 참여할 속셈이 있었던 소련이 이에 동의했고, 38도선이 또다시 한반도의 분할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국이 소련에 제의한 일반명령 제1호로 나타났다. ‘북위 38도선 이북에 있는 일본군은 소련군 사령에게 항복절차를 밟고, 그 이남에 있는 일본군은 미군 사령관에게 항복하라는 내용’을 담은 「일반명령」 제1호를 소련에 제의하였다. 이것은 38선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38선이 갖는 의미는 일본 항복을 위한 일시적이었으나 실제로는 남북을 갈라놓는 정치적 의미의 경계선으로 작동하였다.

미국은 맥아더의 명령으로 당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하지[J. R. Hodge]중장 휘하의 24군은 한반도 진주준비에 들어갔으며, 8월 25일에는 해리스 준장이 이끄는 선발대가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어 9월 8일에는 하지 중장이 지휘하는 본대가 인천을 거쳐 다음날인 9일에는 서울로 들어와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일제를 상대로 항복 조인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일본군 무장해제 작업에 착수하였다. 울진이 속해 있는 강원도에는 9월 20일에 미군이 춘천에 진주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중순까지 전역에 주둔하였다.

미소의 38선 분할 점령으로 인해 당시 울진이 속해 있는 강원도는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말았다. 이내 사라질 듯한 38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졌고, 38선에 대한 양쪽의 경비는 더욱 엄중해지고 단단한 장벽으로 변해 갔다.

1945년 11월 무렵 38선 이남에서 미군의 군정부대가 배치를 완료되었다. 1946년 1월 4일 주한미군정청이 공식 성립되었다. 주한미군정청은 38선 이남의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졌다. 미군정청은 ‘한국인화 정책’에 따라 1947년 6월 남조선과도정부가 설치되면서 조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인 부장, 미군인 고문제의 실시였다.

당시 울진에는 1945년 10월 29일 무렵 제66군정중대가 삼척에 배치되어, 울진, 삼척, 강릉을 관할하였다. 1945년 11월 18일 강릉의 관할 부대는 제38군정중대로 변경되었다.⁵⁵⁶ 울진은 강원도에 속하면서 울진면을 포함한 8개 면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미군정기에 울진의 경찰은 강원도 관할의 2관구 아래 제10구 경찰서를 운영하였다.

1945년 12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미국·영국·소련의 3국 외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에 관한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안이 채택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를 돕기 위해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새로 수립될 임시정부와 협력하여 최대 5년 안에 신탁통치를 실시

556. 신상준, 1997, 『미군정기의 남한행정체계』, 한국복지행정연구소, 51쪽

한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스크바삼상안이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에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라는 머리기사가 잘못 보도되었다. 정확한 모스크바삼상안의 결정안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에서는 반소 분위기가 팽배해 지고, 소위 ‘반탁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1946년 1월 2일 좌익은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의 민정사령관 로마넨코로부터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안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들은 뒤로 ‘삼상 결정안 절대지지’로 돌아섰다.

1946년 2월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해 좌익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고, 우익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결성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1946년 3월 1일, 해방 후 처음으로 열린 3·1절 기념행사가 남산공원[좌익]과 서울운동장[우익]으로 나누어져 열리면서 좌우익의 갈등이 가시화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 양상으로 나타났다.

1946년 8월 미군정청은 「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창설을 발표했다. 이것은 남조선입법기관으로서 정부의 한 기관으로 설치되는 것이었다. 입법위원은 총 90명으로 하였는데, 민선의원 45명을 서울과 각 도에서 선출하고, 관선의 원 45명은 좌우합작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지사령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점차 의원 전부가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입법위원의 자격은 만 25세 이상, 선거 직전 1년 이상 대표하는 도나 지역의 합법적 거주자이어야 하고, 일제하에 중추원 참의(參議)·도회의원(道會議員) 또는 부회의원(府會議員)의 지위에 있던 자, 칙임관급(勅任官級) 및 그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조선 인민에게 손해를 끼치며, 일인(日人)과 협력한 자는 의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 민선의원 선출은 1946년 10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실시하였는데, 울진에서는 국민회 소속의 전영직(田永稷)이 선출되었다.

1946년 6월 정읍에서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서 분단의 주장이 가시화되었다. 또 미군정은 1946년 5월 15일 조선공산당 세력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는 ‘정판사위조지폐 사건’을 발표하면서 좌익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계속되는 미군정의 좌익에 대한 압박은 1946년 9월 무렵 좌익을 사실상 불법화하였다. 이에 좌익은 미군정에 대응해 신전술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한 전역에서 9월 총파업이 발생하였다. 9월 총파업은 10월 1일 대구에서 ‘항쟁’으로 촉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폭동’, ‘사건’, ‘항쟁’ 등 입장에 따라 성격 규정이 서로 다르기도 하다. 이 ‘항쟁’은 경북, 경남, 전라, 충청, 제주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울진은 강릉·삼척 지역과 함께 인민위원회의 영향력이 컸다. 해방 후 울진은 영월, 강릉, 삼척 등 동해안 지역과 함께 인민위원회와 10월 ‘항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곳이었다. 강릉에서는 좌익계열 혐의로 2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삼척에서는 인민군 세포조직 관련자 100명

이 체포된 것에서도 파악이 된다.⁵⁵⁷

1947년 3월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이 ‘트루만독트린’을 통해 대소봉쇄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계의 냉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한반도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1947년 9월 17일 유엔으로 이관시켰다.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총회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고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1948년 1월 8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왔으나 소련과 북한은 ‘미소 양군 철수와 자주적 임시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북한 입국을 거부하였다.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가 통과되었다. 선거일은 5월 10일로 결정되었다.

1947년 7월 한국민족대표자대회의 조직을 통해 이승만은 본격적인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나섰다. 반면, 좌익은 단선단정반대투쟁을 전개하였는데, 1948년 ‘2.7구국투쟁’, 4·3항쟁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여러 정치세력은 1948년 4월 20일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모였다. 연석회의에 다녀온 김구 세력은 1948년 5월 5일 남조선단선반대전국위원회를 결성해 선거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미군정 사령관 하지에게 미군 철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하지는 유엔 결의대로 정부 수립 뒤에 미군은 철수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제헌의회 선거에서 울진에서는 무소속의 김광준이 당선되었다.

제2절 한국전쟁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울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반도는 통일국민국가가 아닌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입법 활동에 주력하였다. 1948년 8월 5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기초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한 이래 8월 16일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상정되고, 9월 1일 통과되었다. 이에 정부는 9월 22일 법안을 공포하였다.

또 1949년 1월 농지개혁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1950년 1월 상환액과 보상액을 동

557.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3, 『강원도사』9-광복과 분단, 90쪽